

KINU 통일나침반 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2016. 08.



KINU 통일나침반 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 08.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2
III. 주변국의 입장과 반응	4
1. 미국	4
2. 중국	6
3. 일본	8
4. 러시아	9
IV. 북한의 예상 반응	11
1. 핵미사일 능력 강화 노력 지속	11
2. 대남 선전 공세 강화 및 한국 내 분열 조장	12
3. 한중관계 이간 및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 유도	13
V.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14
1. 한미의 대북 핵미사일 억지 역량 강화 계기	14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 가중	15
3.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중러의 반발 가능성	16
VI. 우리의 대응 방안	18
1. 사드 배치의 안보주권적 권리 강조	18
2. 비핵화 로드맵 마련	19
3.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및 한러관계 관리	20
4.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한 외교입지 강화	21
[부록 1] 사드 배치 결정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	22
[부록 2] 주요국의 사드 배치 관련 언급(2014~2016년)	23



I. 문제 제기

- 한미 양국은 7월 8일 “주한미군에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2014년 6월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후 논란이 되어왔던 사드 배치가 26개월 만에 전격 결정
- 한미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목적의 조치이며, 제3국(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강조함.
 -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 취약성 보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한미동맹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입지 확대를 기도하고, 대북제재 이행국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우려됨.
- 사드 배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요인은 적극 활용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중국의 반발에 따른 한중관계에 대한 충격 최소화, 대북제재 이완 가능성 방지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본 보고서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주변국의 반응과 북한의 예상 반응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우리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 한국은 그동안 미국 MD 체제 공식 참여를 유보하는 대신 저층 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옴.
 - 이는 곧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통한다.
- 하지만 최근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의 위협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두 차례(2013, 2016년)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배가해 왔고,¹⁾ 수 차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타격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²⁾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
 - 한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 유지

1)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 조웰 위트(Joel Wit)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북한은 현재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 윌리엄 고트니(William Gortney)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했고, 이 미사일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했다”고 평가

2) 국방부는 2013년 2월 이후 2016년 7월 현재까지 북한은 300mm 방사포를 43발, KN 계열 미사일은 20발 이상을 발사했고, 스커드 계열 미사일(17발), 노동 계열 미사일(5발), 무수단 계열 미사일(6발) 발사 시험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2회(4월, 7월) 발사한 것으로 확인. 「연합뉴스」(2016. 7. 27.)

- 한국 국방부는 2014년 3월 9일 “사드 미사일 구매계획이 없고, 독자적인 한국형 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3월 11일 청와대는 기존의 3NO 원칙을 재확인
- 결국 2016년 북한 핵·미사일 역량이 급진전을 이루자 사드 배치 계획은 가속화되었고, 7월 8일 사드 배치가 결정됨.
 -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는 미사일 방어태세 개선을 위한 조속 협의 필요성을 표명했고, 3월 4일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
 - 5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의향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은 한미의 방어적 조치를 촉발
 - 6월 22일 ‘고각(高角) 발사 체제’로 진행된 무수단(화성 10호)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 한국 배치 계획을 최종 조율하기 시작
 - 7월 8일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 13일 경북 성주의 방공포대를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

Ⅲ. 주변국의 입장과 반응

1. 미국

- 탈냉전 이후 미국은 글로벌·지역적 전략 및 양자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
 - 미국은 2002년 ABM 조약 비준 거부 이후 유럽과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한 대중국 포위·견제의 일환으로 일본에 X밴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MD형 구축함(이지스함) 배치를 완성

-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위협인식이 증대되었고 사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 2014년 미 국방검토보고서(QDR)는 “북한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가 동북아 평화는 물론 미국에게도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growing, direct threat)이 될 것”이라고 규정
 -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
 - 동년 9월 미 국방부 부장관 워크(Work)가 한국정부와 사드 배치를 협의 중임을 언급했고, 2015년 4월 미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역시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 배치를 논의 중이다”고 밝힘
 - 프랭크 로즈(Frank Rose)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차관보는 2015년 4월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 노동스커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핵심적 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 될 것”을 강조

- 특히 최근 북한 핵·미사일 역량의 고도화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와 한국 방위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함.
 -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북 역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적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기존 저층 요격 패트리엇과 함께 중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가 가능하다고 인식
 - 특히 2016년 6월 22일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된 무수단(화성 10호)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

- 미국은 향후 조속한 사드 배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의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국의 미국 MD체제 편입 수순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 말 한국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를 희망
 - 미국은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요구하겠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내 반발 여론을 감안하여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은 사드 배치가 촉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차단을 위해 중국을 자극하는 명시적 언행에는 신중할 것으로 전망

2. 중국

- 중국은 그동안 한미의 사드 배치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
 - 2014년 11월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2015년 2월에는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3월 16일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증시해 주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6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직접 한미 정상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
 - 중국은 6월 2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 이행보고서에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표시

-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중국은 동아시아 전략 및 미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계 구축의 중요한 진전이자 ‘전략적 균형’의 훼손으로 인식
 -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국 포위·견제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인식
 - 중국은 사드 레이더(AN/TRY-2)의 탐지 활동이 길림성(吉林省)·절강성(浙江省)에 배치된 동평(DP) 계열 중거리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우려를 표명

-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 효용이 없는 과도한 대응으로 보고, 오히려 중국 견제용으로 인식
-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상응 조치’를 언급했으나 역내 중요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외교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성명을, 국방부는 ‘상응 조치’를 언급한 담화를 발표
 - 중국은 한미의 방어적 차원의 사드 배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의 설명 및 공동논의 제안을 거부
 - 하지만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 증대, 미중 전략경쟁 추세, 중일 갈등,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역내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은 쉽지 않을 전망
- 오히려 중국은 향후 걸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비난 언술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비핵화를 위한 역할 모색 및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한국에 대한 공식적 제재 조치보다는 관영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정치·외교적 비난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7월말 열린 ARF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북핵 불용과 대북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핵화를 위한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강력 대처함으로써 '역내 안보 관리자' 역할을 자임할 전망
 - 4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위상을 부각하고 미국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미국=문제 야기 세력' 대 '중국=문제 해결자'의 프레임의 형성 기도
-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및 미사일 전력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중러 모두 사드 배치가 미국 MD 체제 구축 노력이자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호 전략적 협력 모색 가능
 - 따라서 양국은 향후 미사일부대 추가 배치,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증가 등으로 대응 가능
-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무역·통상 보복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나 민족주의 정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압박카드를 강구할 것임.
- WTO 회원국이자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중국이 공개적 보복 조치를 선택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검역과 통관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 등은 선택 가능
 - 또한 중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반한·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의 출현 가능성은 농후

3. 일본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함.

- 아베(安倍) 정부는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경계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통한 한중 관계 변화(갈등 상황)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 일본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 안보 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미국의 MD 체계에 통합된 일본은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협정에 따라 사드배치에 의해 획득된 정보 공유 등이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
 - 일본은 현재 자국이 보유한 해상 이지스함 SM3와 지상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함께 사드 방어 자산이 자국의 안보자산에 추가될 것으로 인식
 - 또한 일본은 주일미군 및 자국 방어를 위해 사드 미사일 일본 배치를 계획 중이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일본의 사드 도입을 위해 대국민 설득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4. 러시아

- 러시아는 사드 배치 결정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함.
- 이미 지난 2월 10일 알렉산드르 티모닌(Alexander Timonin) 주한 러시아 대사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아태지역으로 확장하려

는 미국의 의도는 역효과와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방어 전력의 지속적 강화가 동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비핵화 과정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
-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MD 계획으로 역내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국과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양국 간 공조가 가능하다는 입장
- 러시아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 부대 배치나 쿠릴 군사기지 재개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

○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인식은 중국과 일치하나, 그 대응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함.

- 러시아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지만, 여론의 반응과 관심은 중국과 달리 격렬하지 않은 상황
-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서 구축중인 MD 체제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는 바, 아태지역에서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체적인 안보 정책 재수정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

IV. 북한의 예상 반응

1. 핵·미사일 능력 강화 노력 지속

-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임.
 -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화시킬 것이 자명
 -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예상
 - 다만 북한은 사드배치와 무관하게 기술적·정치적 필요에 따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사드 무력화를 위해 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 능력을 강화할 전망

- 사드 배치 논란 및 대북제재망의 이완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강압 대 강압’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 도발을 암시하는 등 위기고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음.
 - 대북 제재 장기화 국면에서 내부적으로 조성된 200일 전투 등 전시성 동원 체제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5차 핵실험과 같은 성과가 필요
 - 특히 북한은 사드배치의 필요성 및 효용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을 조장하기 위해, 장사정포 능력을 과시하며 수도권에 대한 타격 위협 수준을 높이거나 잠수함 전력의 후방침투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북한은 한반도 위기조성 차원에서 핵실험 가능성을 헐박하

거나 풍계리 실험장에서 위장된 실험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2. 대남 선전 공세 강화 및 한국 내 분열 조장

- 북한은 사드 배치를 한반도 안보환경을 불안케 하는 한·미·일 3국의 도발로 선전할 것임.
 - 조평통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을 ‘동북아 전역을 핵 조준경안에 넣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기도’라고 비난
 -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자위적 대응 등의 명분으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핵 타격론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의 1차적 책임은 미국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북한은 대남 공세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고위급 회담 제의 등 위장 평화공세를 할 것임.
 - 북한의 예상과 달리 한중 및 한러 관계의 균열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대남 대화공세 강화도 가능
 - 7차 당대회 이후 제기했던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과 같은 위장된 평화 및 대화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위장평화 공세의 목적은 사드 배치로 촉발된 남남 갈등 심화 및 반미감정 조장, 그리고 한국 사회 내 대북제재 및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 조장
- 그러나 북한이 사드 배치를 한국 내 분열 조장 기회로 활용하더라도, 대남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북한은 4차 핵실험 전후 이미 매우 공격적인 대남 정책 및 남북간 군사 긴장 고조 상태 유지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북한은 8월 한미연합 훈련, 11월 미 대선을 즈음하여 도발을 감행할 여지
- 북한은 남한 내 사드 반대투쟁을 조장하기 위해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핵 타격 협박, 대남매체를 통한 괴담 유포와 반정부 선동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3. 한중관계 이간 및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 유도

- 북한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북중 경협 강화, 정치적 관계 개선 등을 시도할 것임.
 - 중국은 북한의 긴장 유발 행동, 미사일 실험 및 추가 핵실험에 대해 계속 비판적 입장을 취하겠지만, 북중관계를 일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대미 전략의 지렛대로 활용할 의도 보유
- 북한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유도할 것임.
 -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및 한러 관계가 균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중·대러 관계 복원 및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 이완 등의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
- 그러나 한·미·일 對 북·중·러 대결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시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사드 배치로 인한 불만 공유에도 불구하고 북·중·러 간 상호 '전략적 불신'이 강하게 존재하고, 한·미·일 3국의 결합 강도에 비해, 북·중·러의 결합 강도가 현저히 약하기 때문임.

V.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1. 한미의 대북 핵·미사일 억지 역량 강화 계기

- 사드 배치 결정을 촉발한 직접적 원인인 “북한 핵·미사일 역량의 고도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결국 한미의 대북 핵·미사일 억지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임.
 -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고체연료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 KN-08 대륙간탄도탄 재진입체(nose-cone) 실험 공개,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사출 실험 등 일련의 핵·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지속 추구
 - 이에 한미 양국은 7월 8일 공동발표문에서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 사드 배치로 기존 저고도 미사일 요격용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함께 중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짐.
 -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고각’의 무수단(화성10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각’ 무수단 미사일 공격에도 대응 가능
-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됨.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 가중

-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중관계는 물론 한중관계도 동시에 중요시하고 있으나,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는 소원해졌지만, 상호간에 전략적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조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
 - 중국은 한국과도 전략적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고, 시진핑 시기 한중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
 -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7월말에 개최된 ARF회의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딜레마가 드러났는데,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상호신뢰 훼손을 언급하고 '사드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

- 사드 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북중관계의 미세한 조정은 가능함.
 - 중국에게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전략적 부담이자 관리의 대상,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드를 통한 압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결과
 - 최근 ARF회의에서 2년만에 북중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북중정상회담이나 대규모 경협은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 다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동아시아의 긴장과 불안정성이 장기화 되고 미중 전략경쟁 추세가 심화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렛대로서 북한 및 북핵문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

○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 및 중국내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한국에 협력적이었던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최근까지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내 탈북자와 북한 노동자 문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묵인 혹은 협조적 태도를 보인것도 사실
-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자국의 원칙적 입장 혹은 ‘민생’ 등을 강조하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한국정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

3.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중리의 반발 가능성

○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증대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사드 체계의 실효성 및 효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사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인식을 보유
-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저층고각 등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계획 수립은 당연한 자위적 조치라고 인식

- 사드 배치 이후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고 일본도 한국이 '중국경사론'에서 벗어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
- 반면,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할 것이고, 이에 편승한 북한은 역내 국가간 갈등 요인을 활용하려 할 것임.
 -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가 미국 MD 체계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는 형태라고 인식
 -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외교·군사·경제적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
 - 또한 중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MD 관련 전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불배제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북한이 한중 긴장관계 및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한국의 주도권 약화 가능성
 -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 이행 동력이 약화되고, 남방 대 북방 삼각대결관계가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동북아 세력균형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의도적 경시도 가능
 - 이러한 동아시아 갈등 국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가능

VI. 우리의 대응 방안

1. 사드 배치의 안보주권적 권리 강조

-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핵무기의 병기화'와 '선제핵공격'론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화성-10) 실험에 성공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도 진전
 - 사드 배치는 북한의 능력 증강에 대한 불가피한 안보적·주권적 선택이며, 중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가 상응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
- 사드 배치는 북핵 능력 증가에 따른 동북아 전략 균형 파괴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전략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님을 강조함.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의해 동북아 전략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바, 한국과 미국은 사드배치로 이에 방어적으로 대응
 - 동북아 전략 균형의 복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써 가능
 - 사드는 우리의 안보에 필요한 조치이며 변경하거나 타협할 의지가 없다는 태도를 주변국에게 단호하게 천명
- 북한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제재국면 완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함.

-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북한의 대남 도발, 핵·미사일 능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도발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내에서 안보 위기감과 대북 비판 의식은 높아질 것임
- 북한에 대한 중러의 불신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 견지

2. 비핵화 로드맵 마련

- 사드 배치는 궁극적으로 관련국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 사드 배치는 북핵 능력 증가로 인한 동북아 균형 파괴가 한국과 미국의 어떠한 대응을 초래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주변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것임.
 - 사드배치는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이 진행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보다 강력한 조치로 공동 대응하게 될 것임.
- 사드 배치 결정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함.
 - 사드 배치 및 운용은 비핵화 차원이 아닌 핵 억지 및 방어 차원의 결정인 만큼 사드 배치 결정이 비핵화 추진 경로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2017년 말로 예상되는 사드 시스템의 실제 운용 시기까지 대북 제재,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등 비핵화를 고리로 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로드맵 마련 필요

3.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및 한러관계 관리

- 사드 배치 결정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라는 원칙을 공고히 한 만큼 향후 예상되는 한중 및 한러 관계 장애요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반발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드 관련 미국의 대중국 대화 추진 및 양자 간 신뢰 형성을 촉구
 - 중국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한·미·중 대화 제의도 고려
 - 향후 한·미·일 공조 강화 추세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요구가 있겠지만, 중국의 반발 및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신중히 진행할 필요
 -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강경 대응에 대비하여 대러 설득 및 관리가 필요한 바, 특히 극동지역 개발 참여 및 경협 확대 등을 통해 한러관계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간 신뢰 제고 필요
-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형성된 ‘북한 vs 5자’ 구도가 사드 배치 이후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주권적 대응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는 필요한 조치
 -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 는 중국·러시아를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 필요
- 특히 중국의 반발이 한중관계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국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 할 필요
- 이를 위해 양자(한미, 한중, 한러), 小다자(한·미·중, 한·미·일, 한·일·중 등), 다자(ASEAN, G20 등) 등에서 고위급 소통 강화 필요

4.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한 외교입지 강화

-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문제이자 미중 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통일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는 미중 양국에게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
- 따라서 한·미·중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및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
-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중국의 미국과의 신형대국 관계 구축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미중 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 한·미·중 3각 협력의 범위를 북핵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북 압박 조치를 마련하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 등의 조치도 제시

[부록 1] 사드 배치 결정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

2016. 7. 8.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부록 2] 주요국의 사드 배치 관련 언급(2014~2016년)

〈2014년〉

일시	국가	발언자	내용
6.3	미국	커티스 스키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국방연구원 포럼에서 “미 국방부에 사드의 한국 전개를 요청했다”고 발언
6.5	미국	국방부	“한국 정부, ‘사드’관련 정보 요청했다”
7.25	러시아	외무부	논평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에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한반도핵문제 해결에도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
10.1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한국 정부와 사드(THAAD)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10.3	미국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한국 정부와 논의하지 않았다”
10.18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	“한미 정부 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공식적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
11.26	중국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명확히 반대한다”

〈2015년〉

일시	국가	발언자	내용
1.27	미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공식협상은 전혀 없었다”
2.4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	한중 국방장관회담서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표명
2.10	러시아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아태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역효과와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
2.10	미국	존 커피 국방부 대변인	“한미 당국 간 사드 배치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11	미국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2.13	미국	제프 폴 국방부 공보담당관	“현재 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진지하고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커비 대변인의 언급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3.15	미국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동맹) 방어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쓸지 결정하는 건 한국 자신”
3.16	중국	류첸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달라”
3.21	북한	로동신문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싼 변두리에 각이한 급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사면팔방으로 미사일 공격을 들이대려는 목적” “조국통일대전으로 맞서겠다”
3.26	북한	외무성	(담화) “사드는 선제공격용”
4.7	미국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	“지금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한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방향(협상)으로 나간다면 사드는 북한의 노동·스커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11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사드배치 논의단계 아니다”

일시	국가	발언자	내용
4.17	미국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상원 청문회 “한반도에 사드 포대 배치 논의중”
5.18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
5.19	미국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	“우리는 사드 포대의 영구적인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 고려하고 있다”
		제임스 윈펠드 합동참모본부 차장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관과 협상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
5.31	중국	쑨젠궈 중국군 부총참모장	“사드 배치 우려”
10.30	미국	록히트 마틴(사드 제작사)	“한미 사드 배치 공식·비공식 논의 중”
10.31	미국	록히트 마틴(사드 제작사)	“양국 정부 간 논의 알지 못해”
11.2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논의 된 바 없어…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것”

〈2016년〉

일시	국가	발언자	내용
1.22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사드 한반도 배치 공개 권고
1.31	미국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사드 배치 한미동맹이 결정할 사항”
	북한	로동신문	“내외 호전광들은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다그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날로 증대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
2.8	미국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	“앞으로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사드 배치)가 가능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
2.9	러시아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 통해 ‘사드 배치 우려’ 표명
2.11	중국	왕이 외교부장	“안보 관련 조치 주변국 이해와 우려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게 중요”(독일 뮌헨 안보회의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사드 배치 논의 불만 표출)
2.12	중국	왕이 외교부장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사드 배치를 ‘유방(중국)을 겨누는 항우(미국)의 칼춤’에 비유)
2.15	중국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	사드 한반도 배치 “결연한 반대”
2.17	중국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미국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할 것.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착수한 것은 이 때문”
2.23	중국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사드 배치 한중관계 파괴”
2.24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시 사드 필요 없다”
2.25	미국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공동실무단 앞으로 1주일 내에 첫 회의 할 것”
	미국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건 아니다”

일시	국가	발언자	내용
2.29	미국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사드 한반도 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는 별개 문제”
	중국	우다웨이 中 6자회담 수석대표	“중국 측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천명했다”
3.2	중국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3.3	러시아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한반도 사드 배치, 국제 사회의 우려 키울 뿐”
3.11	중국, 러시아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중·러 안전 위협”
3.22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사드 배치 원칙적 합의 하에 논의 중”
3.31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한반도 사드 배치 단호히 반대”
4.29	중국, 러시아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드 배치는 긴장 상황에 기름 붓는 격”
	미국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대화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다”
6.2	미국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상그릴라 대화서 한 장관 만나 사드 논의”
6.4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	“중국 정부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 (상그릴라 대화서 한민구 국방장관 만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재확인)
6.7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
7.8	중국	외교부 성명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
7.11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 “사드 배치될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
7.14	북한	로동신문	“현대판 ‘을사오적’들의 만고죄악” “사드 배치놀음은 승냥이의 손을 빌어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동족의 핵보검을 없애보겠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

*주: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정리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나침반 16-05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 02-2269-9917
인 쇄 2016년 08월
발 행 2016년 08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